

5월부터 절연유 물질 검사 의무화(PCBs)

맹독성 염소계 유기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CBs)의 근절을 위한 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모든 전기 절연유(絶緣油)에 PCBs 함유여부 검사가 의무화된다.

- ※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 전기적 안정성이 높아 변압기의 절연유 등으로 사용됐으나 강한 독성·생체잔류성 등으로 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사용 규제중인 화합물
- ※ 전기절연유 : 주로변압기에 사용되며 우수한 절연 및 냉각능성이 요구되어 종전에는 PCBs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광유, 실리콘유 등으로 대체

PCBs는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이다. 발암성·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우려되는 독성물질로 '30·'40년대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돼 지난 2004년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근절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79년부터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s 사용을 금지했으며, '96년부터 PCBs 함유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이 변압기에 사용된 폐전기절연유에서 다량의 PCBs가 함유돼 있음을 밝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현재 대표적 사용처인 한전·발전소 등이 보유한 변압기 약 166만대 중 약 20%가 PCBs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PCBs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PCBs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홀름협약 목표(2025년)보다 10년 앞서 2015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PCBs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 요청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규격을 근간으로 생산업체 및 사용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통되는 전기절연유내 PCBs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과 분석방법 등 KS 규격 9종을 제·개정했다.

기술표준원은 새 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월에 전기절연유 생산업체, 사용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PCBs 분석방법 및 기준치 설정에 대한 KS 규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PCBs 규제 전기절연유 KS 규격 확립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원활한 공동협조의 모범사례일 뿐 아니라 국제적 약속인 스톡홀름 협약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04. 5.17일에 발효되었음

(문의 : 산업자원부 전기기기표준과 02-509-7299)

전자제품 살 땐... '전기흡혈귀' 잡는 에너지절약 마크 확인하세요

-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대기전력 1W기준' 17일부터 시행 -

전자제품 살 때는 전기흡혈귀 잡는 에너지절약 마크를 확인하세요.

'전기흡혈귀'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계속 전기를 빨아먹는다는 뜻에서 붙은 '대기 전력'의 별칭. 전자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둬으로써 리모컨 신호대기 등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이 가구당 월 35,000원, 국가 전체로는 연간 5,000억원씩 낭비됨에 따라, 내년부터 13개 주요 전자제품 대기전력 기준이 1W로 강화된다.



에너지절약

산자부는 TV·컴퓨터·VTR·오디오 등 기존 11개 품목에 대해 대기전력과 오프모드 기준을 강화하고, 라디오카세트와 비데 등 2개 품목의 신규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을 1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판되는 제품 중 이 기준을 따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한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기존 '자체시험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체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을 확대해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19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가전업계의 기술개발 유도와 국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 품목 확대 및 기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 'Standby Korea 2010'을 발표하고 2010년 의무적 대기전력 1W정책시행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 대기전력 저감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문의 :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1)

전기용품 안전기준, 국내환경 맞도록 대폭 정비

- 국제표준 위주 안전기준 한국형 안전기준으로 정비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은 냉·온수기, 발욕조 등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내년까지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대부분 IEC 국제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오며,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사용습관·문화 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의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예) 전기압력솥은 일치하는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품목의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폭발방지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별도의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중
 -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제규격이 없어, 국내환경에 맞게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전기준의 정비는, 국제표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해당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은 품목마다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이 결합되거나 여러가지의 기능제품은 안전기준보완 및 세부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전문가관과 합동으로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06.7월말까지 정밀검토하고,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품목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07년까지 현행 안전기준을 전부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표준원은 금번 안전기준의 정비로, 최근 새로이 출시되고 있는 웰빙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기존 제품의 안전기준 세부적용범위도 명확하게 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안전인증대상 : 247개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전기기기류 132 품목	- 전기톱, 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17품목
- TV, 오디오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26품목	- 모니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 9품목
- 형광등기구, 램프 등 조명기기 18품목	- 전선, 스위치 등 전선 및 전기부품 45품목
 -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군포)	- 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 한국전자파연구원(경기 용인)	
-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서 교부
국내·외 제조업자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인증방법(신청서류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 부품명세표)
 - 공장심사 :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 제품시험 :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

※ 안전인증 처리기간 : 45일 이내

(문의 : 산자부 제품안전정책과 02-509-7235)